

시민 안전 · 생활 편의 · 현안 해결 탄력

전주시, 지역 정치권 협력으로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4억원 확보

전주시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4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활SOC 개선과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활SOC 분야의 경우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사업 9억 원 △삼천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억 원 △전

산전 산책로 정비사업 5억 원 등 총 31억 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시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과 주민 이용 편의 개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천교 내진 및 보수보강공사 6억 원 △용복동 세천 정비사업 3억 원 △금암고 폐교 철거사업 4억 원 등 총 13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통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 사고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지역 현안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 유치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현 국토부장관 겸임)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에 꼭 닿는 장소인 청소년센터, 체육시설, 교량 등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에 대한 미증례 예산"이라며 "전주가 살기 좋은 생활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병, 현 통일부장관 겸임)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을 통해 전주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들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확보에 적극 나서 시민 중심의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산단지역 노동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단체와 2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산단지역 노동자 아침식사 지원

전주시, 사업 참여 민·관·단체와 상생 협약 체결

전주시는 산업단지 내 새벽 출근 노동자들의 결식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9월부터 '산단지역 노동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단체와 2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박현정 (재)전주시복지재단 이사, 양순기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 지부장, 이경진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유혜숙 (유)수온씨티 대표이사, 한상복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전주시복지재단은 기부금 관리와 사업비 집행,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는 간편식 공급업체 선정과

위생관리를,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관리와 보험 가입을 맡는다.

(유)수온씨티와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은 배식 장소를 제공키로 했다.

효성·휴비스·전주시산업단지협의회·NH농협 등 지역 기업·단체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한 '산단지역 노동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오는 9월 3일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엔(&) 수요일든 밥상' 명칭으로 총 15회 진행된다.

기부금 3500만원을 활용해 김밥·컵밥 등 간편식을 제공, 연인원 약 3000명의 산업단지 노동자에게 따뜻한 아침 한 끼를 전달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폭염 대응 시민 안전 행정력 집중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지속 추진... 현장 중심 대응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주시가 9월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폭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특보 발령 시 체계적 위기 대응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운영 관리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폭염 종합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여름 평균기온과 폭염일수, 열대야일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자"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주시가 9월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7월 전주지역 평균기온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28.5도를 기록했다.

또 전주지역의 경우 전북지역 폭염 일수(18.1일)보다 높은 23일을 기록했고, 열대야일수도 전북지역(6.9일)보다 높은 16일을 기록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더위 탈출처 역할을 하는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35곳 늘어난 총 58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냉방기 작동 상태와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 폭염 대책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5억 4740만 원을 책정, 그늘막과 쿨링포그, 스마트승강장, 승강장 냉방 시설 등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무더위쉼터 운영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왔다. 전주시 생활지원사와 방문간호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약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점검 빈도를 격일에서 매일로 늘려 세심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발주공사장과 민간 공사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농업인과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작업 시간 조정을 권고하고, 마을 방송과 문자 알림을 통해 폭염특보 및 행동 요령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산단 입주기업, '전주함께장터' 동참

전주지역 산단 입주기업들이 기업이 이끄는 소비와 나눔 잔치인 전주시 '전주함께장터'에 동참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산업단지협의회(회장 이운영)는 2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운영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운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함께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산업단지협의회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기부금 1000

만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기부금 전달 후 환담을 통해 산업단지 기업의 공동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운영 회장은 "산업단지 기업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산



전주지역 산단 입주기업들이 전주시 '전주함께장터'에 동참했다.

단입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는 '전주함께장터' 정신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와 기업

이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과 상생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어진박물관, '왕실문화 심층탐구'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어진박물관(과장 하재식)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왕실 속 공예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왕실문화 심층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왕실문화 심층탐구'는 어진박물관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경기전 정전 단청 기록화 사업'을 통해 조사된 경기전 정전 왕실 단청을 소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신청자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10회차에 걸쳐 이론과 실기, 결과물 제작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기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이 끝난 후 참여자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작품전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작품전을 통해 관람객들은 경기전 정전 내의 단청들을 엿볼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1일 오후 2시부터 어진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하면 되며, 참가비는 4만 원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주저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